

특별회의
-국가폭력과 트라우마

“이행기 정의에 있어서 국가폭력 트라우마와 치유”
- 한국의 5·18 민주화운동과 광주트라우마 센터를 중심으로 -

명지원
[한국, 광주트라우마센터장]

나는 여기 서 있다. 온전한 주체로서...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와 이야기를 공유하고 나는 너와 마주하며 같이 서 있다.

Prof. Nora Sveaass

일제 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까지 고문 및 학살 등 수많은 국가폭력이 한국사회에서 자행되었다. 그러나 가해자인 국가가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자각을 하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광주트라우마센터가 한국 최초로 본격적인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시작한 시점이 2012년이다. 국제적으로 1980년대부터 고문 생존자의 치유 및 재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실천이 이뤄졌음을 비교해 볼 때, 한국은 늦어도 너무 늦은 시작이었다.

한국의 치열한 민주화운동과 인권운동의 성과로 인해 국가폭력이란 용어는 현재 일상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국가가 폭력의 주체일 수 있다는 단순한 사실을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사 청산을 위한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과 보상 및 배상 그리고 기억과 기념에 이르기까지 국가폭력을 둘러싼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담론은 풍성해졌지만, 국가폭력 생존자의 치유 및 재활의 권리는 여전히 국가적,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무엇보다 여전히 미완의 상태로 남겨져 있는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문제는 사회적 정의의 지연뿐 아니라 국가폭력 생존자가 겪고 있는 고통의 지속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국가와 사회는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생존자는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여전히 싸우고 있다.

이 글은 광주트라우마센터의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 경험과 생존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이행기 정의의 문제를 국가폭력 생존자의 트라우마 치유 및 재활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현재 한국의 성과와 과제를 검토한다.

1. 국가폭력 생존자의 치유에 대한 통합적 접근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로부터 고문과 폭행 등의 국가폭력을 겪는 사람은 트라우마를 비롯한 복합적인 후유증을 경험한다. 국가폭력은 사람을 변형시키는 존재적 사건이며 특히 고문은 개인 정체성 훼손을 목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뤄진다.¹⁾ 가해를 정당화하기 위한 국가의 지속적인 낙인과 격리는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만성화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고통을 안겨준다. 이 때문에 국가폭력 생존자와 가족은 고문·학살과 같은 직접적인 가해로 인한 후유증만큼이나 이후의 감시와 통제, 사회적 낙인, 진실왜곡과 폄하에서 오는 심각한 2차, 3차 트라우마를 겪는다.

1) 페터 엘사스, 최현정 옮김, 『고문·폭력 생존자 심리치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9, 45면.

따라서 국가폭력 생존자의 심리적, 사회적 후유증에 대한 치유는 트라우마와 그 후유증에 대한 전문적 이해뿐만 아니라,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과 같은 정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이고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방법과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곧 치유자의 역할과 함께 사회적, 정치적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요구 받는 것이다.²⁾

국가폭력 생존자를 둘러싼 문화적, 정치적, 역사적인 맥락은 사건 이후의 심리적 결과 및 정체성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만일 고문 생존자에게 모든 맥락이 삭제된 채 오직 정신과적 진단 중심의 접근이 이뤄진다면, 생존자의 치유 및 재활은 현저하게 방해받을 뿐 아니라, 오히려 병리적인 규정으로 인한 외상의 재현을 초래할 수도 있다.³⁾ 따라서 국가폭력 트라우마를 정신의학 및 심리치료의 측면에서 뿐 아니라, 사회구조적 환경과 제도적 문제, 국가폭력의 내밀한 구조 및 영향까지도 살펴야만 통합적인 치유 및 재활이 가능하다.⁴⁾ 세계의 고문 생존자 재활센터가 학제적, 통합적 접근법을 시도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덴마크 심리학박사 잉거 아거(Inger Agger)는 고문 등 국가폭력 생존자의 심리적 고통을 이해하고 치유하는데 두 가지 접근방식이 있다고 말한다. 인권적 접근방식과 트라우마적 접근방식이 그것인데 특히, 인권적 접근방식에서는 정의의 회복과 정치적 재활을 강조한다.⁵⁾ 세계의 고문 생존자 재활센터와 관련된 학계에서 이러한 접근법은 이미 기본적인 사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광주트라우마센터 역시 초창기 설립 당시부터 주요한 과제와 역할을 개인에 대한 치유사업뿐 아니라 인권옹호 및 국가폭력 예방 사업을 중심축으로 설정하였다.⁶⁾

2. 정의의 회복과 생존자 치유

정의의 회복은 생존자의 치유와 분리되지 않는다. 사법제도를 통해 가해자의 유죄를 확인하는 과정은 공동체의 정의를 회복하는 과정임과 동시에 생존자에게는 잃어버린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특히 생존자에게는 국가폭력의 압도적인 경험을 재해석하는 계기가 되며, 공식화된 인정을 획득하는 과정이 된다. 실제로 기념식이나

2) 페터 엘사스, 같은 책, 57면.

3) 최현정, 이훈진, 「한국 현대사 고문 생존자의 내러티브 정체성 형성 과정」, 한국계슈탈트상담연구, 6호, 2016, 31면.

4) 김왕배, 「'트라우마'의 치유과정에 대한 사회학적 탐색과 전망」, 보건과 사회과학 제37집, 2014, 7면.

5) 잉거 아거, 「아시아 고문 생존자 증언 치료 실천 연구 프로젝트」, 광주트라우마센터, 2016.

6)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국가폭력 피해생존자와 가족의 치유를 위한 광주트라우마센터(이하 센터)가 2012년 10월 국내 최초로 개소했다. 5·18 관련자들의 자살로 5·18 트라우마가 재조명되었고 생존자들의 정신건강 및 치유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뒤늦게나마 치유를 위한 센터가 설립됐다. 센터는 트라우마 후유증 치유를 위해 상담, 예술치유 프로그램, 신체적 후유증 완화를 위한 물리치료, 증언치유 프로그램 등 10여 개의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 치유의 인문학 등 공동체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과 국가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인권 옹호 활동을 하고 있다.

가해 행위에 대한 책임있는 사과와 같은 무형적이고 상징적인 방법이 금전적 배상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이렇듯 가해자 처벌은 생존자의 심리적 건강에 꼭 필요한 ‘안전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기존 연구들은 생존자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 PTSD와 우울증이 훨씬 적게 발생한다고 한다.⁷⁾ 처벌을 확정하여 가해자를 공동체에서 분리하고, 확실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생존자들은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과 공식적인 인정에 의지한다.

그러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노력은 그 자체로 생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강제한다. 대부분의 생존자는 경찰 및 사법기관에 의한 유/무형의 위협과 마주하게 되거나, 무관심과 침묵으로 일관하는 사회의 냉대를 경험하게 된다.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생존자의 기대는 끊임없이 실패의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에 있다. 법적 절차에 대한 접근 가능한 정보의 부족, 높은 소송비용, 재판 과정에서 재트라우마가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 등이 불처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⁸⁾ 국가폭력에 의한 상처와 두려움이 국가폭력을 ‘용인’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처럼 억울한 피해를 말할 수조차 없게 함으로써 과거가 현재를 강력하게 규율하는 방식이 국가폭력의 잔혹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행기 정의의 수준은 철저히 현실의 정치적, 사회적 역학관계에 의해 결정된다.⁹⁾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최근 알려지기 시작한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 사건이다.

3. 5·18 성폭력과 38년 만의 증언

2018년 서지현 검사의 고발을 시작으로 미투운동이 본격화되었다. 무거운 침묵을 극복한 고백이 이어졌고, 한국사회의 여성혐오, 성폭력 피해, 구조적인 성차별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피해자에 대한 지지를 넘어서, 문제해결을 위해 실천적인 활동이 현재까지 다양하게 진행 중이다. 현재의 정치, 사회적 변동과 역학관계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현재의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미래를 전망하는 동시에, 과거의 경험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다.

2018년 5·18민중항쟁 38주년을 전후하여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조명되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이미 1980년 직후에도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사실들이 상당히 구체적인 소문으로 떠돌았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황들이 포착된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7) 광주트라우마센터, 「사법정의 구현-법적절차에 참여한 고문생존자를 위한 심리사회적 지원의 중요성」 8면 이하 참고. 원문은 IRCT, *In pursuit of justice: The importance of psychosocial support for torture victims participating in legal proceedings*, 2014.

8) IRCT, 같은 책 24면.

9) 이재승, 『국가범죄』, 앨피, 2011, 35면.

최근 알려진 바와 같이 「5·18 민주화운동 보상 심의 자료」에서도 성폭력 등의 피해에 관한 기록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¹⁰⁾ 그러나 1980년 당시 사회는 무관심했으며, 외면했다. 성폭력 피해자는 국가의 보상 심사를 위해서 감춰왔던 성폭행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며 어렵게 증언했으나, 국가는 보상 기준으로 정해진 항목(사망, 상이, 행방불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폭력에 대한 피해는 배제한 채 간략한 신체적 피해만을 기록한 것이다. 이 심의 자료에서 확인된 성폭력 관련 피해자의 상당수는 제대로 된 치료나 조사도 받지 못하고 성폭행에 의한 출산, 30년 간의 정신병원 생활, 분신 등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으면서 죽어갔다. 이제 그들은 짧은 기록으로만 존재한다. 많은 국가폭력의 진실이 감춰져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특히 성폭력에 관한 문제는 40년 가까운 시간동안 묻히고 배제되었으며, 때때로 외면되어 온 것이다.

“5공 청문회(1988년) 때 이런 것(1980년 당시의 성폭력 피해)들을 얘기를 해야겠다고 했더니 국회의원이나 보좌관들이 '아무리 악랄하지만 성폭행까지 당했다고 하면 누가 믿겠냐.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하면서 얘기하기를 굉장히 꺼려하더라고요. 아마 당시 사회적 분위기도 그랬고”¹¹⁾

이미 확인된 피해조차 그 폭력의 잔혹성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때로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묻혔다. 그러나 2018년 미투운동의 영향으로 용기를 낸 피해자의 증언이 드러났다.

“얼마 전에 여검사가 미투를 해서 38년 만에 나도 용기를 냈습니다. (...) 몇 달 전 미투 폭로를 보면서 그 나쁜 놈을 죽이고 싶었습니다.”¹²⁾

한 언론사를 통해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한 이 피해자는, 2018년 미투운동을 지켜보며 피해 신고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강조하여 말한다. 당시 광주 트라우마센터가 접수 확인한 5·18 시기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총 3건이다. 이 중 2명은 위의 피해자와 동일하게 2018년 서지현 검사의 미투#가 피해 신고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여성에 대한 억압과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사회문화적 요인의 전진적 변화가 국가폭력의 진실규명에 관해서도 그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의 민간인 성폭력 범죄 진상규명을 위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에 의하면 총 17건의 성폭력 피해가 확인되었다. 생존자

10) http://m.hani.co.kr/arti/area/area_general/868278.html#cb

11) <https://www.nocutnews.co.kr/news/4969760>

12)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43649.html>

증언을 종합하면 더 광범위한 성폭력 사건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리의 과제 중 하나이다. 국가폭력의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이 사법적, 제도적인 변화뿐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국가와 사회가 '5·18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에 온전히 공감하고 주목할 때 폭력의 진상은 좀 더 밝혀질 것이며, 치유 또한 의미있게 진전될 것이다.

4.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은 책임자 처벌과 보상 및 배상, 기억과 기념을 위한 전제이다. 무엇보다 국가폭력 생존자의 치유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최근에는 이런 노력의 결과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과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연구 보고서 발간이라고 할 수 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된 지 1년 3개월 만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2020년 1월 출범했다. 조사위의 우선 과제로는 최초 발포와 집단 발포를 명령한 책임자 규명, 행방불명자와 북한군 침투 조작, 무고한 양민 학살, 성폭행 등 계엄군의 반인륜적 행위 등 7가지 사건에 대한 규명이다. 특히 40년째 풀리지 않고 있는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의 책임자 규명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생존자들은 1988년 광주 청문회와 1995년 검찰 수사를 비롯해 아홉 차례에 걸친 진상규명 노력에도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5·18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한다. 무엇보다 국가 차원의 공인보고서가 제작된다는 점에서 5·18민주화운동을 겨냥한 왜곡과 폄훼를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최근 국가정보원은 조사위에 약 4천 페이지 분량의 민주화운동 기록물을 제공했다는 소식이 전해 오면서 그동안 접근하지 못했던 진실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광주트라우마센터는 지난 6월 조사위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①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상호 협력 ② 국가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심리지원 활동 등에 대해서 교류·협력을 합의하고, 구체적으로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범위에 포함된 사건의 피해자 신고 독려 및 연계작업, 5·18 민주화운동 중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조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참여한 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속 조사관의 대리외상 및 소진 예방을 위한 심리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5.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연구 보고서 발간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해결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세웠다. 그리고 2017년 5·18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방안 연구」를 추진하였고 2019년 1월 그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라는 점에서 이 활동 보고서는 의미가 있다.

이 보고서는 일제의 식민 통치, 분단과 전쟁, 학살과 군사독재가 이어진 한국 현대사는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의 역사’였다고 규정하고 ① 국가폭력의 적용 범위와 시기 ② 국가폭력 피해자 및 치유대상자 추산 ③ 국가폭력 피해의 특징 및 트라우마 치유의 특성 ④ 별도의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신설의 필요성 ⑤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법적 형태 등 국가폭력 트라우마에 관한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보고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국가폭력의 적용 범위와 시기 및 피해자 규모에 대한 추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제강점기부터 현재(2019년)까지 국가폭력으로 인한 피해당사자의 숫자는 2,835,134명, 가족까지 포함한 광의의 피해자는 7,234,470명으로 추정된다. 이 중 현재 생존자는 약 1,835,903명이고, 국가나 유족회 등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피해자는 146,348명이다. 무엇보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가 설립된다면 3년 이내에 치유를 요구할 잠재적 내담자는 15,834명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치유에 대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조하는 부분이다. 보고서는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에서 가장 큰 특징은 피해자가 한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져야만 치유가 완성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에서 공동체 연계가 핵심적인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을 특히 강조하는데 ① 지역 내 교육 당국과 협의하여 독자적인 교사 연수를 계획하거나, 교육 당국의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국가폭력과 트라우마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고, 학교 현장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과거의 국가폭력 사례와 그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하여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②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인권교육, 민주 시민교육, 국제 이해교육 등 다양한 인권과 평화에 대한 교육과 연계 등 중앙,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실질적인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려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강조한다. 그것은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 설립에 있어서 기관의 독립성 및 자율성에 대한 보장이 최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의 고문생존자 재활 센터 대부분이 NGO기구로서 난민과 이민자 등 외국인을 주요 대상

으로 하는 반면에, 자국의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국가가 직접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만드는 것은 한국이 최초이다. 국가기구이면서 동시에 과거뿐 아니라 현재의 국가폭력까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권의 성격에 따라 독립성과 자율성이 침해받을 위험성이 존재한다. 또한 효율성과 성과를 강조하는 행정시스템에 의해 치유 및 재활 사업에 대한 심각한 개입과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페터 엘사스는 ‘홀로코스트에 관한 가장 충격적인 폭로는 몰살이 일상적인 관료주의의 절차 중 하나였다는 사실’이라는 바우만의 말을 언급하며 “관료주의는 윤리가 부재한 채 완전히 기계적으로 목표를 수행한다. 이 비인간성이 곧 고문의 조건이다”¹³⁾고 지적한다. 따라서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에 대한 명문화뿐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6. 남겨진 사람, 남겨진 책임

광주트라우마센터가 치유 활동을 시작한 이후, 9년이 지났다. 센터가 치유를 향해 걸어가는 속도보다 더 크고 빠르게 2차, 3차 가해가 생존자들을 쓰러뜨리고 있다. 5·18민중항쟁 40주년을 맞이하는 생존자들은 기대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5·18이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하고, 가해자인 전두환이 회고록을 발간하면서 본인이 5·18의 희생자라고 주장하는 현실은 당사자들을 매일 매 순간 1980년 5월의 폭력 속으로 돌려보낸다. 이런 현실에 불안과 고통을 호소하는 것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만이 아니다. 1980년 5월 광주 도심 곳곳에서 계엄군의 학살과 이후의 탄압을 목격한 시민들 또한 트라우마 피해자다. 트라우마 공동체인 것이다.

가해자와 책임 통치자들은 잔혹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그들의 범죄행위는 처벌되어야 한다. 치유를 위한 선결 조건은 악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이고, 불의와 잔학행위에 대항해 싸우는 것은 생존자의 존엄과 인간성을 성공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중요하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배상, 사죄 등의 근본적인 대응이 있어야만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고 희생자들의 고통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 그리고 비로소 안전하게 치유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 전두환 회고록이 사라질 때, 계엄군의 헬기 사격에 대한 진실과 발포 책임자가 밝혀질 때 비로소 광주와 5·18 생존자들은 치유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그 시대의 아픔에 대해서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다. 국가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의 온전한 치유는 피해자 개개인들에 대한 치유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하나의 치유공동체로 변화되어야 가능하며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13) 페터 엘사스, 같은 책, 45면.